

제공일자	2012. 4. 27(금)	담당자	이상우 수석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3775-9051)	연락처	3775-9055	총 2 매

제목 : 일본의 공적연금 단일화 개혁과 정책적 시사점

일본의 공적연금 통합 추진을 참고하여 국내 공적연금 통합 논의 필요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이상우 수석연구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공적연금 단일화 개혁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최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공적연금 제도 간의 형평성 문제로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다. 그 동안 공적연금 통합을 포함한 연금개혁이 지지부진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더 이상 공적연금의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의 통합과 관련된 법률안을 제정하여 2012년 4월 국회에 상정하였으며,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된다.

※ 일본의 공제연금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과 유사하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 등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공적연금을 말함.

우리나라는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통합하여 하나의 국민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전자부분을 기초연금(또는 국민연금), 후자 부분을 후생연금보험으로 명칭하고 있음(이하 ‘후생연금’이라 함).

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본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가입하는 공적연금인 공제연금을 **2015년 10월까지 후생연금에 통합**시키고 국가공무원의 연금요율을 2018년까지 후생연금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공제연금에만 존재하는 직역가산금을 폐지하고, 유족연금의 수익자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재혼 등의 사유로 자녀 또는 부모가 연금을 계승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폐지하며, 퇴직 공무원의 민간 기업 취업 시 공무원연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이외에도 가입연령 제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 장애연금 지급요건 등을 후생연금의 기준으로 통일시키며, 정부는 비용을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간의 급여격차를 줄여 수급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수직역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적인 공적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편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KIRI Weekly를 참고하세요.

<http://www.kiri.or.kr>